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6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주철현 · 양문석
김원이 · 윤준병 · 이기현
오세희 · 임미애 · 민병덕
강유정 · 김우영 · 양부남
박해철 · 박수현 · 박지원
문금주 · 서삼석 · 박희승
박용갑 의원(19인)

제안이유

최근 환경부는 홍수·가뭄·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, 낙동강, 영산강, 섬진강,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‘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’로 선정, 발표하였음.

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,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.

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,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

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, 특히,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.

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,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·예측·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(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).
- 나.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는 것으로 함(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).
- 다.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·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).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) 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계획수립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·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전 협의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8조의2(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사업 협의) 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계획수립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·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